

 금융위원회	<h1>보 도 자 료</h1>			• 생산적 금융	
				• 신뢰받는 금융	
• 포용적 금융		보도	2017.9.12(화) 조간	배포	2017.9.11(월)
책 임 자	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 손 성 은 (02-2100-1730)			담 당 자	송 희 경 사무관 (02-2100-1721)
	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장 강 석 민 (02-2100-1750)				정 진 구 사무관 (02-2100-1751)

제 목 :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강화

-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 · 독립적 감사 · 임직원 신원확인 등
내부통제 핵심사항을 「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」에 포함 -

1 추진배경

-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금융회사(의심거래보고 등)·FIU(심사분석)·법집행기관(분석자료 기반 수사·조사 등)간 협력에 기반하여 운영
- 이 중, 금융거래의 불법자금·자금세탁행위 여부를 일선에서 확인·보고하는 금융회사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
- 금융정보분석원(FIU, 원장: 정완규)은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확립에 중점을 두어왔음
- '14년부터 각 금융업권별 고객·상품·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내부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구축하도록 지도
 - * FIU는 각 업권별 자금세탁 위험을 분석하고, 이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「FIU 위험평가시스템」개발·구축, 업권별 위험관리 지침서 마련·제공
- 매년 FIU의 평가 및 금융회사 자체평가를 통해 임직원 교육·연수 등 전문성 확보, 자율적인 관리·감독 강화 등을 유도

- 국제적으로도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역할이 강조되는 추세
 - 강화된 FATF 국제기준*(12년)은 금융회사가 위험기반(Risk-Based Approach) 내부통제 프로그램을 갖출 것을 명시
 - * FATF :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기구, 「자금세탁 및 테러·확산금융 방지에 관한 국제기준」 제정 및 각 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, 위험국가에 금융제재 조치
 - 미국 등 주요국은 자국에서 영업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수준을 강화하고, 엄격한 검사 및 제재 부과
 - 제재대상국과의 거래 등 명백한 의무위반 행위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, 미흡한 경우 제재 부과
 - * 미 당국은 자금세탁방지체계 미흡을 이유로 대만 Megabank에 벌금 1.8억달러 부과('16.8월), 국내은행 미국 현지지점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개선명령 부과('17.1월)
- FIU는 올해 초('17.1.20)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효과적인 全社的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였고,

- **최고경영진의 역할과 책임**을 명확히 하여 **방지 역량을 업그레이드** 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최고 내부규범인 「**내부통제기준**」에 **자금세탁 관련사항을 규율할 필요**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짐

2 추진방안

- 국제기준 및 국내법상 자금세탁방지 관련 **내부통제 핵심사항**을
금융회사 「**내부통제기준**」에 포함하도록 의무화
- ➡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6호 신설
- * 적용대상 : 「금융회사 지배구조법」에 따른 금융회사 (은행, 금융투자업자, 종합금융회사, 보험회사, 상호저축은행, 여신전문금융회사, 금융지주회사)

➡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6호 신설

- * 적용대상 : 「금융회사 지배구조법」에 따른 금융회사 (은행, 금융투자업자, 종합금융회사, 보험회사, 상호저축은행, 여신전문금융회사, 금융지주회사)

※ 「자금세탁 및 테러·확산금융 방지에 관한 국제기준」 中 내부통제 관련 내용

- (제1번) 각 국은 금융기관 등이 **위험평가에** 기반하여 자신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**확인·평가**하고 **경감조치**를 취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함
- (제18번) 금융기관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**독립적 감사, 직원 교육, 신원 확인**을 포함한 **내부통제 프로그램**을 이행하여야 함

[1] 자금세탁 위험평가·관리체계 강화

- 고객확인·의심거래보고 등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을 위한 필수사항인 “자금세탁 위험평가” 관련 내부 업무체계를 국제기준 및 금융정보분석원의 지침* 등에 따라 강화**

* FIU가 업권별 자금세탁 위험유형을 분석하고, 위험관리 지침서를 마련·배포
** 금융거래(금융자산의 수입·매매·상환·발행, 대출·보험·보증 등), 신상품 개발, 자기자본 투자 등 금융회사의 업무 관련 모든 분야에서 자금세탁 위험평가 실시

- 업권별·영업형태별로 자금세탁 위험 유형이 상이하므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위험을 분석·대응하는 내부 업무체계를 설계·운영해 나갈 필요

[2] 독립적 감사체계 구축

- 자금세탁방지업무 담당부서와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 전문가가 업무수행의 적절성,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*하고,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내부감사체계 운영

* (예) 감사(위원회)가 준법감시부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점검

[3] 임직원의 교육훈련 및 신원확인 의무화

-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와 관심 제고,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·훈련 필요
- 또한, 임직원이 연관된 자금세탁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임직원 채용·재직 중 신원확인(일명 “직원알기제도”) 의무화

* 신규채용시 특금법상 고객확인에 준하여 신원확인 및 검증 절차 등 수행, 채용 후에도 신규채용시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신원확인 실시

3 기대효과

- 금융회사 최고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도록 한 지배구조법 체계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사항을 규율함으로써
- 각 금융회사 내부의 자금세탁 방지체계가 획기적으로 강화되고, 제도운영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

- 이를 통해 해외진출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당국의 강화된 검사 및 대규모 제재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,

-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대외공신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

* 자금세탁 위험기관으로 판단될 경우 외국 금융회사와의 환거래가 중단되는 등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, 대외공신력 확보가 매우 중요

- 한편,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함으로써

- 금융회사의 全社的 내부기준 마련 및 효과적인 작동 여부를 중요 항목으로 점검하는 FATF 평가*(19.2월 예정)에도 적절히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

* FATF 국제기준 이행상황을 약 1년간 평가하며, 이행부진의 정도에 따라 국가신인도 하락, 금융제재(금융회사 해외지점 설립 금지 등) 등 불이익

4 추진일정

-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(17.9.11~10.25, 45일간)

* '17.10월중 금융회사 대상 간담회 개최 예정

- 관계기관 의견 조화, 규개위를 거쳐 금융위 의결(17.12월 예상)

< 금융 용어 설명 >

- 자금세탁(ML: Money Laundering) :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재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가장(假裝)하거나 은닉(隱匿)하는 행위
- 자금세탁방지제도(AML: Anti-Money Laundering) : 불법재산의 가장·은닉을 범죄화하고, 금융회사의 고객확인·의심거래보고 등을 통해 불법재산이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
- FATF(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) : '89년 G7 합의로 설립된 국제기구. UN 협약 및 UN 안보리 결의 관련 금융조치(Financial Action)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(Task Force)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